

● [법과 정치]

1. 정치를 바라보는 관점 [2점] [정답] ①

노동조합의 쟁의 행위도 정치로 보는 A는 국가 이외의 집단에서도 정치 현상이 나타난다고 보는 집단 현상설이다. 이에 반해, 정치가 국가 기관의 활동에 한정된다고 보는 B는 국가 현상설의 관점에 해당한다. ㄱ. 집단 현상설은 국가 현상설에 비해 정치의 범위를 넓게 본다. ㄴ. 국가 형성 이전의 정치 현상을 설명할 수 있는 관점은 집단 현상설이다. ㄷ. 국가 기관의 권력 작용은 집단 현상설, 국가 현상설 모두 정치 현상으로 본다. ㄹ. 국가 현상설은 정치를 국가만의 특유한 현상으로 본다.



2. 사회 계약론 [3점] [정답] ④

A는 로크, B는 홉스, C는 루소이다. 루소는 직접 민주 정치를 옹호하며, 대의제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가졌다. ① 사회 계약론자들은 모두 국가를 인민의 자연권 보전을 위한 수단적 존재로 보았다. ② ㉠은 홉스의 군주 주권론을 의미한다. ③ 로크가 자연권으로서 강조한 것은 개인의 재산권이다. ⑤ 로크가 말한 저항권의 행사 사유는 정부가 인민의 자연권 보전에 실패할 때이며, 국가의 경제적 부의 증진 실패는 해당 사유로 보기 어렵다.

같은 내용 다른 유형 문항

다음은 근대 사회 계약론자의 주장이다. 밑줄 친 ㉠~㉢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권력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절대적으로 좌지우지하지 않으며, 그럴 수도 없다. ㉠ 입법권은 모든 사회 구성원의 공동 권력이 법을 제정하는 사람이나 단체에 위임된 것일 뿐이므로 인간이 사회를 이루고 공동체에 위임하기 전에 ㉡ 자연 상태에서 가졌던 권력보다 크지 않다. ... (중략)... 자연 상태에서 인간은 타인의 생명, 자유, 재산에 대한 전횡적인 권력을 갖지 못하며, 단지 ㉢ 자연법이 자신과 타인을 보호하기 위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만 권력을 행사할 수 있을 따름이다. 따라서 ㉣ 국가와 입법 기구에 위임할 수 있는 권력도 그 정도에 그치며, 입법 기구는 그 이상의 권력을 행사할 수 없다. 이 권력은 최대한으로 확장되더라도 사회의 공익을 넘어서지는 못한다. 이 권력은 단지 ㉤ 국민을 보호하는 목적만 가지고 있으므로 국민을 파괴하고 예측하고 빈곤하게 만들 권리는 결코 가지지 못한다.

- ① ㉠은 개인의 생명, 자유, 재산의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 ② ㉡은 평화롭지만 잠재적 투쟁의 상태이다.
- ③ ㉢은 국가 권력이 형성되기 이전부터 존재하는 규범이다.
- ④ ㉣은 개인에 앞서 존재하는 자연 발생적 질서이다.
- ⑤ ㉤에 위배되는 정부의 권력 남용에 대해 저항권이 인정된다.

로크는 국가가 자연 발생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생명, 자유,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사회 구성원들의 계약을 통해 성립된 것이라고 보았다. 정답 ④



3. 절대 다수 대표제 [3점] [정답] ②

정답을 찾는 사고

(가) 선거 제도는 절대 다수 대표제로, 최종 당선자가 과반수 득표를 하여 당선되도록 하는 방식임에 유의해야 한다.

해설

② 을은 2위 득표 후보자와 200표 차이로 당선된다.

↳ (나)에서 1차 집계 결과, 과반수를 획득한 후보자가 없으므로 최하위 선호자의 표를 넘겨주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최하위 선호자인 병 후보자의 2순위 선호는 을 후보자이므로 을 후보자는 6,100표(4,400+1,700)를 확보한다. 따라서 5,900표(4,600+800+500)를 확보한 갑 후보자와는 200표 차이로 당선된다.

오답 피하기

- ① 1차 집계에서 당선자가 배출된다. ↳ 1차 집계 결과, 과반수를 획득한 후보자가 없으므로 1차 집계에서는 당선자가 없다.
- ③ C 선호 유형에 해당하는 1,700표는 사표(死票)가 된다. ↳ C 선호를 가진 투표자의 표는 을 후보자로 넘겨져 을의 당선에 기여하게 된다.
- ④ E 선호 유형의 표가 가장 먼저 다른 후보자에게 넘어가게 된다. ↳ E 선호를 가진 투표자의 표는 갑 후보자에게 투표한 것이며, C 선호의 표가 가장 먼저 다른 후보자에게 넘겨지게 된다.
- ⑤ ㉠은 두 차례 이상 반복되어야 당선자가 최종적으로 결정된다. ↳ 투표자의 표가 다른 후보자에게 넘겨지는 과정은 한 차례이다.

같은 내용 다른 유형 문항

[자료2]에 근거하여 [자료1]의 (가), (다)의 방식으로 대표를 선출할 경우, 각각의 당선자를 옳게 연결한 것은?

[자료1] 대표자 결정 방식
(가) 한 선거구에서 가장 많은 표를 획득한 후보자가 당선된다. 과반수와 상관없이 한 표라도 많은 후보자가 당선된다.
(나) 선거 결과 과반수 득표자가 없는 경우 상위 2명을 대상으로 결선 투표를 하여 과반수를 획득한 후보자가 당선된다.
(다) 유권자는 출마한 후보자 모두를 대상으로 지지하는 순위를 표기한다. 투표 완료 후 1순위를 과반수로 얻은 후보자가 있으면 당선자로 확정된다. 그러나 과반수 득표자가 없는 경우 최저 득표자*를 1순위로 선택한 유권자의 표를 해당 유권자가 2순위로 선택한 후보자에게 배분하며, 그 표는 배분받은 후보자가 얻은 1순위 표로 간주된다. 이런 방식으로 최저 득표자를 계속 탈락시키면서 과반수 득표자가 나올 때까지 이 배분 과정을 반복한다.

* 최저 득표자: 유권자가 1순위로 선택한 표를 가장 적게 얻은 후보자

[자료2] 투표한 유권자의 선호 순위

유권자	후보자	갑	을	병	정
A		1	2	3	4
B		1	3	2	4
C		1	4	3	2
D		1	4	2	3
E		2	1	3	4
F		3	1	4	2
G		4	1	3	2
H		3	2	1	4
I		4	2	1	3
J		4	2	3	1

- (가) (다) (가) (다)
- ① 갑 을 ② 갑 병
- ③ 을 병 ④ 을 정
- ⑤ 병 정

(가)에 따르면 10표 중 4표를 획득한 갑이 당선되지만 (다)에 따르면 선호 순위에 따른 배분 과정을 반복한다. 그래서 처음에 3표를 획득한 을이 1차 배분 과정에서 J의 1표를 받고 2차 배분 과정에서 H, I의 2표를 받아 총 6표로 당선된다. 정답 ①

4. 대통령제 정부 형태 [2점] [정답] ⑤

갑국은 여소야대 국면이 가능한 것으로 보아 대통령제 정부임을 알 수 있다. 대통령제에서는 대통령 선거와 의회 의원 선거가 별도로 시행된다. ①, ②, ③ 의원 내각제의 특징에 해당한다. ④ 대통령제에서는 행정부 수반과 국가 원수가 같은 인물이다.

5. 헌법의 기본 원리 [3점] [정답] ③

(가)는 복지 국가의 원리, (나)는 국제 평화주의, (다)는 문화 국가의 원리에 해당한다. 평생 교육의 진흥, 국가에 의한 무상 의무 교육 등은 문화 국가의 원리를 실현하는 방안에 포함된다. ① 누진세 제도를 통한 소득 재분배, 사회 보장제 실시 등은 복지 국가의 원리를 실현하는 방안에 해당하지만, 조세 부담의 균등 배분은 '세금을 모두 같게 내자'는 것이므로 복지 국가의 실현과는 거리가 멀다. ② 국군의 해의 파병이 평화 유지를 위한 것이라면 금지될 이유가 없다. ④ 복지 국가의 원리, 국제 평화주의 모두 현대 국가에 들어와 강조된 헌법 원리이다. ⑤ 헌법의 기본 원리는 국가 정책의 방향과 목표를 지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6. 형사 절차 [3점] [정답] ③

자료는 갑이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집행 유예의 유죄 판결을 받게 되는 형사 절차를 나타낸다. ① 미란다 원칙은 피의자를 체포할 때 체포 이유, 변호인 선임권, 진술 거부권 등을 고지하는 것으로, 갑에게도 적용된다. ② 구속 영장 실질 심사는 검사가 청구하는 것이 아니다. ③ 구속 적부 심사는 구속된 피의자가 검사 기소 전까지 청구할 수 있다. ④ 집행 유예는 유죄 판결이므로 석방되더라도 형사 보상 청구의 대상이 될 수 없다. ⑤ 유죄 판결이 내려진 것으로 미루어 보아, 검사는 강도죄 입증에 성공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7. 헌법 소원 심판 [3점] [정답] ②

해설

② ㉠을 위해서는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 헌법 소원 심판에서 위헌 결정은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으로 가능하다. 합헌 결정에는 이러한 조건이 해당되지 않는다.

오답 피하기

- ① ㉠은 권리 구제형 헌법 소원 심판이다. ↳ 기본권을 침해당했다는 이유로 제기한 헌법 소원 심판 사건이므로 권리 구제형 헌법 소원 심판에 해당한다.
- ③ ㉡은 기본권 충돌에서 법익을 형량하여 판단한 것이다. ↳ ㉡은 기본권의 법적 이익을 비교하여 어느 것이 더 우위에 있는지를 판단한 것이다.
- ④ ㉢과 ㉣은 헌법의 최고 규범성을 전제로 가능한 것이다. ↳ ㉢과 ㉣은 헌법이 최고 규범으로서 모든 법령의 제정 근거인 동시에 법령의 정당성을 평가하는 기준이라는 내용을 전제로 한 것이다.
- ⑤ ㉤, ㉥을 볼 때, 해당 법률의 내용은 과잉 금지 원칙에 합치된다. ↳ 침해의 최소성이나 법익의 균형성은 과잉 금지 원칙의 요건에 해당한다.

같은 내용 다른 유형 문항

밑줄 친 ㉠~㉣에 대한 적절한 분석 및 추론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2015년 6월 22일
 헌법 재판소는 지난 2015년 6월 25일 변호사 시험법상의 변호사 시험 성적 공개 금지 규정에 대하여 ㉠ 위헌 결정을 내렸다. 변호사 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한 청구인은 관련 법 규정이 변호사 시험 성적의 공개를 요구할 수 있는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직접 헌법 재판소에 관련 법 규정에 대한 ㉡ 헌법 소원 심판을 청구하였다. 헌법 재판소는 성적 공개로 인한 대학의 서열화 및 대학 간 과다 경쟁 등을 방지하려는 심판 대상 조항의 입법 목적은 정당하나 법익의 균형성 요건 등을 충족하지 못하여 헌법에 위배된다는 결정을 내린 것이다. 이에 따라 변호사 시험 응시자는 변호사 시험 관리 주체인 법무부 장관에 대하여 보유하는 ㉢ 정보를 공개하도록 적극적으로 요구할 권리를 가지게 되었다.

<보기>

- ㄱ. ㉠은 법 규범에 상하의 위계가 있음을 전제로 한 것이다.
- ㄴ. 위 사건에서는 ㉠의 판단에 있어 과잉 금지 원칙을 심사 기준으로 삼았을 것이다.
- ㄷ. 위 사건의 ㉡은 위헌 심사형 헌법 소원 심판일 것이다.
- ㄹ. ㉢은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받기 위한 것이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사례는 기본권 침해를 이유로 한 권리 구제형 헌법 소원의 유형에 해당한다. 정답 ①

유형 문제

8. 국회 [3점] [정답] ③

① 임시회는 대통령 또는 국회 재적 의원 1/4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개회된다. ② 교섭 단체는 20인 이상의 국회의원으로 구성되는 국회법상의 기관으로서 20명 단위로 1개씩 구성되는 것은 아니다. ③ 국무위원의 국회 출석 발언 및 대정부 질문권 등은 의원 내각제 요소에 해당한다. ④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 회부된다.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대통령의 공포로 법률로써 확정된다. ⑤ 면책 특권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 외에서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이다. 지역구 주민과의 만남에서 직무와 무관하게 행한 발언은 면책 특권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

같은 내용 다른 유형 문항

표는 우리나라 국회 의사 일정 중 일부이다. ㉠~㉣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일자	일정	비고
9월 1일(월)	1. ㉠ 정기 국회 개회	9월 1일 ~12월 10일
	2. 제△△회 국회 회기 결정	
9월 2일(화)	1. 본회의 휴회	㉡○○위원회 활동
9월 3일(수)	1. ㉢ 국무총리 임명 동의안	가결
	2. 국회의원 ○○○의 체포 동의안	㉣부결
	3. ㉣ ☆☆☆법률 일부 개정안	가결

- ① ㉠의 개회는 대통령의 요구가 있어야 가능하다.
- ② ㉡은 20인 이상의 소속 의원을 가진 정당이 구성하는 단체이다.
- ③ ㉢은 행정부에 대한 입법부의 견제 수단이다.
- ④ ㉣로 인해 해당 국회의원은 회기가 끝나도 체포되지 않는다.
- ⑤ ㉣의 발의를 위해 재적 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필요하다.

④ 국회의원 체포 동의안이 부결되어 해당 국회의원은 회기 중에 체포되지 않고, 회기가 끝나면 체포될 수 있다. 정답 ③

9. 기본권의 특징 [2점] [정답] ②

(가)는 사회권이 침해당한 사례, (나)는 청구권을 행사한 사례, (다)는 참정권이 침해당한 사례에 해당한다. ㄱ. 현대 복지 국가의 실현을 위해서는 사회권의 보장이 필수적이다. ㄴ. 방어적·소극적 성격은 자유권의 특징이다. ㄷ. 사회권, 참정권과 달리 청구권은 수단적·절차적 권리의 성격을 가진다. ㄹ. 사회권, 청구권, 참정권 모두 국가의 존재를 전제로 인정되는 기본권이다.

10. 조약의 성격 [2점] [정답] ②

제시된 자료는 국제법의 법원 중 조약에 해당한다. ① 국제 관습법에 대한 설명이다. ② 조약은 국가 간 또는 국제기구와 국가 간에 체결된다. ③ 조약은 원칙적으로 체결 당사국에게만 적용된다. ⑤ 우리나라의 경우, 별도의 법률 제·개정 절차가 없어도 대통령의 비준을 거쳐 효력이 발생한다.

11. 금전 대차 계약 [3점] [정답] ⑤

① 계약은 돈을 빌려주겠다는 승낙이 이루어진 2015년 6월 22일에 성립하였다. ② 공증을 받았더라도 강제 집행이 가능하도록 하는 약정이 없는 한, 이를 근거로 강제 집행을 할 수 없다. ③ 소액 사건 심판 청구는 소송 가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④ 소송 전이라도 채권자는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가압류 신청을 할 수 있다. ⑤ 내용 증명 우편은 사실 관계 자체를 증명하지는 못하지만, 채무 이행을 촉구한 사실은 증명할 수 있다.

12. 혼인의 유형 [2점] [정답] ⑤

(가)는 혼인의 실체가 없는 관계, (나)는 사실혼, (다)는 법적으로 유효한 법률혼이다. ㄱ. 배우자 간 상속권은 법률혼에서만 인정된다. ㄴ, ㄷ. 사실혼 부부도 일상 가사 대리권과 정조·동거·협조·부양의 의무가 인정된다. ㄹ. 혼인을 통한 친족 관계의 발생은 법률혼의 경우에만 가능하다.

13. 특수 불법 행위 [2점] [정답] ④

① 공작물에 의해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공작물의 소유자는 과실이 없더라도 무과실 책임을 진다. ② 공작물 점유자인 을이 A에게 지는 배상 책임은 과실 책임의 성격을 가진다. ③ 병의 부모는 미성년자에 대한 감독자 책임을 질 수 있다. ④ 병과 정은 B를 공동으로 폭행하였으므로, 공동 불법 행위 책임을 지게 된다. 공동 불법 행위의 경우 누구의 가해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손해를 입었는지 정확하지 않을 경우, 피해자는 가해자 중 한 사람이나 가해자 전체를 대상으로 손해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 ⑤ (가), (나) 모두 특수 불법 행위에 해당한다.

14. 미성년자와 거래한 상대방 보호 [3점] [정답] ①

ㄱ. 을이 미성년자가 아닌 경우에는 정당한 거래로서 제시된 상황만으로는 취소나 무효가 될 사유를 찾을 수 없다. ㄴ. 을이 미성년자일 경우, 을의 법정 대리인에게 거래를 취소할 것인지 확인을 촉구할 수 있다. ㄷ. 을이 미성년자일 경우, 갑은 을의 법정 대리인이 추인을 하기 전에 거래 의사를 철회할 수 있다. ㄹ. 을이 미성년자일 경우, 을이나 을의 법정 대리인은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

15. 형법과 죄형 법정주의 [3점] [정답] ④

제시문은 주차된 차량을 파손하고 사후 조치를 하지 않은 채 도망친 사람에 대한 형사처벌이 불가능한 이유를 죄형 법정주의의 법리에 따라 설명하고 있다. 즉, 재물 손괴죄의 구성 요건에 타인의 재물을 실수로 파손한 것은 포함되지 않으며, 도로교통법상

의 형사처벌 대상도 되지 못한다는 것이다. ㄴ. 재물 손괴죄의 구성 요건은 '타인의 재물을 고의로 파손한 것'이다. ㄷ. 도로교통법은 형벌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실질적 의미의 형법에 해당한다.

16. 등기부와 임대차 [2점] [정답] ④

① 등기부의 갑구에는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 을구에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이 기재된다. ② 소유자가 A에서 B로 바뀌었다. ③ C가 B의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한 것을 통해 B가 C에게 채무를 진 것을 알 수 있다. ④ 전세권자가 전세권 등기를 하게 되면, 확정일자 받은 것과 마찬가지로 우선 변제권을 가지게 된다. 그러나 우선 변제권이 이전 저당권자에게까지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⑤ △△주택의 현소유자는 B이므로 B는 임대인, 전세권자인 D는 임차인의 지위에 있다.

17. 냉전의 형성과 해체 [2점] [정답] ③

(가)는 트루먼 독트린(1947), (나)는 몰타 선언(1989), (다)는 닉슨 독트린(1969)의 주요 내용이다. ① 트루먼 독트린 이후 이념 중심의 냉전 체제가 형성되었다. ② 몰타 선언 이후 냉전 체제가 종식되었다. ③ 탈냉전 시대 개막 이후 국제 사회는 실리추구 경향이 보다 더 뚜렷해졌고, 이에 따른 국가민족 간 국지전도 증가하였다. ⑤ 각국의 안보에 대해 (가)와 같이 세력 균형을 추구하거나 (다)와 같이 자국의 이익을 우선하는 정책은 국제 사회를 바라보는 현실주의적 관점이 반영된 것이다.

18. 감사원과 국무회의 [2점] [정답] ④

A는 감사원, B는 국무회의이다. ① 감사원은 헌법에 따라 설치된 대통령 직속의 독립된 기관이다. ② 대통령은 국무회의의 의장이 되고, 국무총리는 부의장이 된다. ③ 대통령이 주요 정책을 결정할 때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것은 대통령의 권한 행사에 대한 통제 역할에 해당한다. ④ 국무회의는 일종의 내각 회의로 의원 내각제 요소에 해당한다. ⑤ 감사원장과 국무총리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19. 부당 해고 및 부당 노동 행위 구제 [3점] [정답] ②

갑은 부당 노동 행위, 을은 부당 해고를 당한 상태이다. ㄱ. 부당 노동 행위에 대해서는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이 구제 신청을 할 수 있다. ㄴ. 노동 위원회를 통한 구제가 실패할 경우, 이에 대해서는 행정 소송을 통해 구제 절차를 밟을 수 있다. ㄷ. 부당 해고인 경우에 근로자는 노동 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하는 것과는 별도로 민사 소송인 해고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ㄹ. 부당 노동 행위와 부당 해고는 모두 노동 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20. 소비자 보호 [2점] [정답] ③

ㄱ. 제조물 책임법상 손해 여부와는 관련 없는 내용이다. ㄴ. 신청인은 구입한 게임의 자판이 광고 표시와 다른 점을 지적하며 반품 환급을 요구하였으나 피신청인은 이를 거절하였고, 소비자 분쟁 조정 위원회에서는 이에 대해 허위·과장광고 또는 기만적인 광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피신청인의 입장을 옹호하였다. ㄷ. 소비자 분쟁 위원회의 조정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민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ㄹ. 소비자 분쟁 조정 위원회의 조정안에 대해 신청인과 피신청인이 수락하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발생한다.